

	보 도 자 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	
책 임 자	이동훈 보험과장 (2156-9830)	담 당 자	임형준 사무관 (2156-9832)
배 포 일	2015. 6. 2.(화)	배 포 부 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7매

제 목 : 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 (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)

- ☐ '14.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「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」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
- (소비자 보호 강화)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,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도입
 -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,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
 - (규제 합리화) 보험회사의 겸영·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,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
 - (제재규정 정비) 명의를 대여한 손해사정사를 형사 처벌하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·과징금 상향
 - (기타 개정 사항)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 하고,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신설
- ☐ 금일 의결된 개정안은 '15.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 추진
- ※ 별첨 :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부

<별첨>

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I. 개요

□ '15.6.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

-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7.15일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「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」의 후속 조치 사항을 규정

※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며, 국회에서 법안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

II. 주요 내용

1 소비자 보호 강화

□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 교부

- 휴대폰 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적은 문서(보험안내자료)를 교부토록 함*

* 휴대폰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(통신사)가 아닌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피보험자(가입자)에 대해 설명의무 이행 필요

□ 보험회사의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(비교공시) 강화

-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·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

□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

-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상품설명서·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*를 시행

- * 보험회사의 실제 보험안내자료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
- * 현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의 경우 '11.1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연간 2회 개별 보험약관에 대해 전문가 및 일반인 평가후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음

□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 의무 신설

-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 결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

- * 현재는 일간지 등에만 게재하고 있음

□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

-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
-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* 금지

- * ①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,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, ③ 보험사고 조사시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

- 부당행위 금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

□ 치매 등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조회 지원

-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* 외에 부양의무자, 치료 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

- * 치매환자가 치매보험의 계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

2 규제 합리화

□ 경영·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(One-Pass OK)

- 보험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 등을 받은 경영 업무*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

* 예시)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·투자자문업,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업무 등

-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서 사전 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

□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 폐지

- '상품·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'을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제한 대상에서 삭제*

* 투기와 투자간 구분이 어렵고 보험회사가 대출시 대출을 받는 자가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지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

□ 보험계약 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

-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*에는 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

* 예시)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, ② 모보험회사가 자보험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

3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

□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

- 보험설계사가 보험료·대출금·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

□ 퇴출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

- 보험대리점으로서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토록 함

□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·경고 근거 신설

-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·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

* 현재는 법규 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만 가능

□ 손해사정사 명의 대여에 대한 형사 처벌

- 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 처벌(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)의 근거 마련

□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·과태료 강화

-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 10%p 인상
- 보험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

* (보험회사) 5천만원 → 1억원, (임직원 등) 2천만원 → 5천만원

□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

- 경영공시의무*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

*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경우, ① 조직·재무 등 경영지표, ②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, ③ 소속 설계사 현황 등

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 부당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4

보험회사-대주주간 부당거래 규제 강화

□ 보험회사-대주주간 부당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

- 보험회사가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·용역 거래를 금지

* (현행)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 금지
 (개정안)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·용역 거래 금지

-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절차*를 준수토록 함

* (현행) 대주주 신용공여, 대주주 발행 채권·주식 취득 등 특정 거래시 절차 준수 → (개정안) 정형화된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시 절차 준수

* 사전 이사회 의결 → 거래후 7일 이내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

-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(1억원)를 부과

* 현재는 분기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

-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부당거래시 형사벌·과징금 부과 기준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*하고,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* (현행) 형사처벌 : 5년, 3천만원, 과징금 : 거래액의 20% →
 (개정안) 형사처벌 : 10년, 5억원, 과징금 : 거래액의 40%

*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(거래액의 40%) 부과

5

기타 개정 사항

□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

-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영업기금 요건* 및 본점의 동일 종목 영위 요건* 적용을 명확히 함

- * 영업기금 요건 :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 납입
- * 추가하려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외국보험회사가 영위하여야 함

☐ 모집광고에 대한 보험협회의 심의 기능 강화

- 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개정시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, 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제도의 운영근거 마련
-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은 보험광고가 위법·부당하다고 판명된 경우 광고심의 업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

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검증 의무화

-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,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을 외부 계리업자 등을 통해 검증토록 함

☐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 요구 및 공동검사

-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
-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부처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

☐ 기타 개정 사항

- 보험회사·계리업자 등의 소속 계리사에 대한 교육 의무화
- 보험계리사·보험계리업자의 계리사·계리업자로의 명칭 변경, 개인연금보험의 근거법령 변경(조세특례제한법 → 소득세법) 반영 등

III. 향후 일정

- ☐ '15.6월중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연내 국회 의결 추진